더불어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 보도자료

2026. 9. 14. 월.

베일 벗은 YTN 강제매각... “이동관이 총대 멘 尹정권의 전방위 압박”

- 감사원, 이동관-강경성 수사 의뢰...전 尹비서실장 이관섭도 연루
- 한전KDN-마사회, 산자부의 ‘7월 압박’ 때는 “30% 미만 매각” 협약
- 이동관-이관섭 나선 ‘9월 압박’ 직후에 “31% 전량 통매각” 급선회
- 민주당 미디어TF “30% 넘겨 대기업과 언론사 원천배제...특혜”

드디어 YTN 강제매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방통위원장 이동관이 총대를 멘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 압박’으로 YTN 강제매각이 이뤄졌습니다. 배후의 최정점은 사실상 윤석열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은 YTN 지분 매각에서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공공기관에 정권 차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실행한 이들로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 이동관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차관이던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을 지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수사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산자부 차관을 통해 YTN 지분 매각 방식을 ‘전량 매각’으로 강제 변경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들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와 농림부에 방통위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전량 매각’을 실행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이 개입한 사실도 명백합니다. 강경성 당시 산자부 차관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전량 매각’ 압박을 받은 뒤, 이것이 정권 차원의 방침임을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던 이관섭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이관섭은 당시 실세 중 실세였고 YTN 강제 매각이 마무리된 뒤 윤석열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인물입니다.

정권이 전방위로 나서서 YTN 지분 매각의 방식을 바꾼 이유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각각 YTN의 1대주주, 3대주주였던 한전KDN과 마사회에 대해서는 모두 세 차례의 압박을 윤석열 정권으로부

터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압박은 2022년 윤석열 정권 초기, YTN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한전KDN과 마사회에도 YTN 보유 지분의 매각을 요구했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보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찍어 눌러 결국 ‘매각 입장’을 갖게 하였지만 이때만 해도 각자 매각이었습니다. YTN 지분 취득 가격이 다르니 매각 조건을 달리하는 각자 매각이 당연한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압박부터 매각 방식에까지 정권의 개입이 이뤄집니다. 이른바 ‘통매각’ 강요였습니다. 매각주관사 선정 과정부터 숱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결국 하나의 매각주관사에 의한 통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초까지만 해도 ‘공공기관들이 알아서 매각’한다는 게 매각 추진 부처인 산자부의 입장이었지만 같은 해 7월 13일 갑자기 ‘통매각’ 요구가 이뤄집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대로, 8월 29일 두 공공기관은 두 기관 합산 지분 약 31% 중 29.99%를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방송법상 ‘30% 소유 제한’을 고려한 것으로, 대기업과 언론사의 입찰 참여를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각자 매각이 무산된 마당에 이렇게라도 해야 매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9월, 이동관은 방통위와 산자부에 ‘전량 통매각’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해당 요구가 방통위, 산자부, 그리고 마사회 소관 부처인 농림부를 통해 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강경성 당시 차관은 이동관의 직접 지시를 받는 한편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통해서도 ‘정권의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동관-강경성’ 라인과 ‘이관섭-강경성’ 라인이 동시에 가동되어 ‘전량 통매각’이 관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은 대통령실-산자부 사이의 조율을 주도했거나 대통령실의 지시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이하 미디어TF)는 감사원 감사가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동관과 이관섭 등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사실을 밝혀낸 점은 그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동관과 이관섭의 직접적인 관계 규명, 이관섭 배후로 확실시 되는 윤석열의 역할 규명 등에서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제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가 밝혀야 합니다.

수사 대상을 감사원이 통보한 이동관, 강경성에 국한하지 않아야 하며, 이관섭 등 연루 인물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말맞추기, 증거인멸에 나설 가

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파괴자이자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최선봉이라 불렸던 이동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이관섭, 그리고 여전히 코트라 사장으로 고액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강경성을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당 미디어TF는 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감사원 감사와 무관하게 YTN 매각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방송사업권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의 여러 위법 사항들이 법원에서, 국회에서, 언론계에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그간 방미통위를 향해 제기되던 오해와 의문을 불식시켜 주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
최민희 이정문 이주희 노종면 의원